정책 제안서

경기 '육아바톤' 육아용품 기부·순환 시범사업

작성 참여 김은준
제안서 작성일 2026.04.04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사업목적*

(제안취지)

참고 기사: 엄마·아빠 허리 휜다…육아용품 물가,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 (중앙일보, 2023.11.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752

참고 기사: "육아 시작도 전에 천만원"…서울 산후조리원 특실 2주에 810만원 (매거진한경)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139154b

사업 요약

양육 초기, 고가 육아용품 비용은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저출산 심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등 기존 공공 대여 서비스가 존재하긴 하나, ①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② 물량 부족 및 치열한 예약 경쟁, ③ 위생 및 관리 상태의 복불복, ④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 ⑤ 대여 기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그렇기에 유료 사설랜탈 업체 이용률, 당근마켓 중고 거래 등은 여전히 증가 추세

이에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기반으로 육아용품 기부·순환 정책을 설계하여, 육아 부담을 개인의 시장 선택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기존 대여 서비스가 가지고 있던 ① 물량의 부족 및 예약 경쟁 해소, ② 위생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③ 대여 기간 한계 일부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유아 양육 초기, 유모차·카시트·아기침대 등 필수 육아용품은 사용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구매 비용을 요구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효용 불균형에 따른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청년 세대의 출산 기피 및 저출산 심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대여 서비스(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등)가 운영 중이나, ① 관내 거주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접근성의 문제, ② 치열한 예약 경쟁과 단기 대여 위주의 운영으로 실제 필요 기간만큼의 이용이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 ③ 직접 방문 수령에 따른 불편함, 위생 관리 상태의 불확실성 등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존재함.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육아용품 유료 사설랜탈 업체 이용률, 당근마켓 중고 거래 등 민간 거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본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기반으로 육아용품을 확보·관리·순환하는 「경기도형 육아용품 공공순환센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예약·배송 체계를 통해 0~36개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수 육아용품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출산 및 초기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최종적으로는 단순한 물품 대여를 넘어, 육아 부담을 개인의 시장 선택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순환형 사회서비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함.

사업대상*

(수혜자)

-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중 0~36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 규모: 시범사업 권역 3,000~5,000가구

- 추진방법: 온라인 신청 → 물류센터 출고 → 가정 배송 → 회수·세척·재배치

소요사업비

예산안(총합: 2,700,000천원)

• 육아용품 확보(중고 매입·기부 연계): 1,000,000천원

• 물류센터 리모델링 및 설비(최소필수): 400,000천원

• 세척·검수·보관 인건비(외주·파트타임 혼합): 500,000천원

• 배송 인력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거점+외주 택배 혼합): 450,000천원

• 시스템 연계 및 운영비: 200,000천원

• 홍보·성과평가·예비비: 150,000천원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 이내 시범사업)

사업내용*

1. 추진근거

■ 청년 정책으로서의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 제3조(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제3조(기본이념)

청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도모함

→ (적용 논리) 소득 형성기인 2030 청년 세대에게 고가의 육아용품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임. 해당 정책은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책이 될 수 있음.

■ 저출생 대응 및 양육 지원의 법적 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산·양육 지원 시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 조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산·양육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적용 논리) 육아 물품 공유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은 가정 자립 기반 형성의 핵심 요소임

■ 아동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3조(기본이념)

①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적용 논리) 검증된 육아 물품의 선순환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양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적 책무에 해당함

■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조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적용 논리) 본 정책은 사용 주기가 짧은 육아 용품의 재사용(Reuse)을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 가능한 공유 경제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음

2. 사업내용

1) 사업대상(수혜자)

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중 0~36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사업량: 시범사업 권역 3,000~5,000가구/유모차·카시트·아기침대·젖병소독기·분유포트 등 핵심 육아용품 10~15종 , 연간 50,000회 이상 대여

추진방법: 온라인 신청 → 물류센터 출고 → 가정 배송 → 회수·세척·재배치

소요예산: 2,700,000천원

2) 세부 사업내용

가. 「경기도 육아용품 순환센터」 구축

- 도 소유 유휴부지 또는 공공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광역 물류 거점 구축

전면 시행이 아니기에, 권역 기반 시범사업으로 추진

Ex): 도시형 지역 1개 (예: 수원/고양)/도농복합 지역 1개 (예: 이천/양주)

- 기능별 공간 구획: 세척·살균 구역 / 정비·검수 구역 / 패킹·보관 구역 / 입출고 관리 구역

- 육아 초기 10~15종 핵심 품목 중심 운영(유모차, 카시트, 아기침대, 젖병소독기 등)

-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 관리체계 구축(물류 운영 검증/수요 패턴 분석/정책 효과 측정)

나. 육아용품 무상대여 및 배송서비스 운영

- 대상 품목: 유모차, 카시트, 아기침대, 아기욕조, 젖병소독기, 분유포트, 기저귀갈이대, 아기체육관, 유아식 탁의자, 바운서 등 고가·대형·필수 육아용품

- 이용 방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재고 확인 → 온라인 예약 → 자택 배송 → 사용 종료 후 회수

- 대여료 없으나, 미반납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고 거래 수익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반납 보증금'제도 도입. 물품 상태에 대한 보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납에 의의를 두는 것 (순환센터에서 관리: 소액으로 설정/미반납 시 일정 기간 이용 제한/물품 기부 시 면제)

품목별 표준 기간 설정 (행정 기준에 따라 관리)

다. 중고 육아용품 매입·기부 순환 시스템 구축

- 중고 매입 기준 마련:

1) 유모차·카시트: 제조 5년 이내, 프레임 손상 없음, 안전벨트·고정장치 정상 작동

2) 아기침대·욕조: 변색·곰팡이·균열 없음, 세척 가능 구조

3) 전자기기: 현장 전원 테스트 및 기본 부속품 구비 여부 확인

- 매입가: 출시가 대비 최대 20%

- 기부 참여자에게 기부영수증 발급 및 도지사 명의 감사장 제공

- 신청 기반 방문 수거 및 직배송 체계 구축

단계적 공급 체계 구축: 1년 단위 시범사업이기에, 전체적으로 병행

1) 1단계(초기): 공공 구매 중심 (안정적 확보)

2) 2단계: 중고 매입 병행 확대

3) 3단계: 기부 중심 순환 체계 전환 (기부참여 유도: 기부영수증 발급/공공 인증 제공)

라. 수요 관리 체계 구축

형평성과 과열 방지를 위해 쿼터 기반 운영 도입:

1) (시범 이후, 전국 단위 확대 시) 시군별 인구 비례 배분(시·군별 배정량 = (영유아 인구수 비중 × 0.5) + (재정자립도 역 지수 × 0.3) + (취약계층 비율 × 0.2))

>> 영유아 인구수(50%):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기본 물량을 배정

>> 재정자립도 역 지수(30%):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어려운 낙후된 지자체 우선
(경제학적 '수직적 형평성')

>> 취약계층 비율(20%): 다자녀·한 부모·저소득 가구 비중 높은 지역 가중치 부여

2) 월별 이용량 제한: 전체 물량의 100%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매월 신규 입고 물량(기부+구매)의 80%만 예약제로 운영. 남은 20%는 긴급 수요(중도 입국, 갑작스러운 가정 사정 등)를 위한 '긴급 예비분'으로 관리)

3) 0~12개월 영아 가정 우선 배정

4) (시범 이후, 전국 단위 확대 시) 기부 지수 가점제: 특정 지역에서 기부가 활발히 일어나면, 해당 지역의 다음 달 대여 쿼터를 일정 비율(예: 기부량의 10%) 상향 조정

마. 인력 운영 구조

총사용 인력: 32명

- 세척·살균 인력: 경력단절여성 6명, 청년 2명(총 8명)

- 정비·검수 인력: 경력단절여성 2명, 청년 4명(총 6명)

- 패킹·보관 인력: 경력단절여성 4명, 청년 2명(총 6명)

- 입출고 관리 인력: 경력단절여성 4명, 청년 2명(총 6명)

- 현장 총괄: 경력단절여성 1명, 청년 1명(총 2명)

- 배송 인력: 청년 4명(총 4명)

※ 육아·돌봄 경력단절 여성, 청년 우선 채용 원칙 적용

바. 정책 실행 단계

1) 수요조사 및 품목 우선순위 설정

2)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 매뉴얼 확정

3) 중고 매입·기부 시스템 시범 운영

4) 기존 앱 연동 시스템 구축

5) 시범지역 운영 후 도 전역 확대

6) 이용률·만족도·비용 절감 효과 모니터링 및 개선

※ 본 사업은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대여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영유아 초기 단계의 고가·대형 육아용품 영역을 보완·확장하는 광역 단위 순환 복지 시범 모델임.

3. 참고 사례

1. 서울시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자치구 장난감도서관·육아지원센터): 서울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모차, 카시트, 아기침대, 바운서 등 대여 운영. 저렴한 연회비 기반이나, 대형·고가 품목 공급과 배송 연계는 제한적. 경기도에 제안한 주민참여 사업은 '광역 단위 통합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확장형 모델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9520

2. 세종시 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 출산 가정 대상 유모차·카시트 등 무상 대여 시범사업 운영. 직접 방문 수령 방식 중심. 경기도에 제안한 주민참여 사업은 본 사업은 모바일 기반 신청·배송 연계 구조로 접근성 강화

https://www.newspea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7

3. 부산시 사하구 출산용품 대여 사업: 관내 출산가정 대상 육아용품 무상 대여 일부 품목 위주. 단기 이용 구조. 경기도에 제안한 주민참여 사업은 0~36개월 전 주기 육아용품 패키지 제공으로 범위 확대

https://www.sahascc.or.kr/community/board_view.asp?sn=1229&BoardID=0004

사업효과

(기대효과)

1.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청년 가계 자립 지원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고가(高價) 육아용품 무상대여를 통해 가구당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직접적 육아 비용 절감 효과 창출.

경제적 안전망 강화: 소득 형성기인 청년 세대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2. '사회적 육아' 패러다임 전환 및 양육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책임성 강화: 육아 부담을 개인의 시장 선택(구매·사설 렌탈) 영역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공적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재정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전문 세척·소독 및 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대여 서비스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해소하여 정책 체감도 및 신뢰도 향상.

3. 자원 순환형 공유경제 모델 확립 및 탄소중립 실천

자원 이용 효율성 극대화: 사용 주기가 짧은 육아용품의 재사용(Reuse)을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과잉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

지속 가능한 ESG 행정 구현: 민간 기부와 공공 관리가 결합된 '선순환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시범사업 제시.

사업지역

경기도 시범지역 2개 권역

2026년 04월 04일